공동주택관리 경비·청소 용역 소방시설관리

전남메일

www.jndn.com 2023년 1월 20일 금요일

제9044호 (음력 12월 29일) **창간일 1989년 6월 29일** 대표전화 (062)720-1000



TEL . **061) 392-7900**

얽히고 설킨 이슈와 변수…예측불가 혈투 예고

<u>⟨</u>

총선 1년여 앞 광주·전남 화두는

존재감 없는 현역교체 목소리 진행형 '이재명 리스크' 촉각 '친명·관망파' 등 분화 조짐 올드보이 귀환·선거구 변수도

내년 4월 치러지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 권이 급속히 총선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 내년 총선은 각종 이슈들과 변수들이 맞물리면서 역 대 가장 예측이 불가능한 선거가 될 것으로 전망 ▶미리보는 4·10 총선 2·3·4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선거구제 개편, 선거구획정 등이 대두되면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안갯속 정국이 이어질 것 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광주·전남 정치권도 현역 물갈이론과 중량급 신진의 도전 및 중진 의원들의 귀환, 국민의힘의 교두보 마련과 진보정당의 약진 여부 등이 얽히 고 설켜 어느때보다 치열한 싸움을 예고하고 있

특히 민주당의 텃밭인 지역정치권은 친이재 명계와 관망파 등으로 사분오열되고 분화될 조 짐을 보이면서 경선을 통한 공천과정에서 극심 한 진통을 겪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내년 4월 10일 22대 총선을 1년여 남긴 현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민족의 대명절 설을 맞아 19일 오전 광주 북구청직장어린이집에서 열린 '전통문화체험' 행사에서 어린이들이 세배 를 하고 있다.

광주·전남 민심은 들러리로 전락한 현역의원들 에 대한 교체 요구와 더불어 혁신공천을 통한 민 주당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최 근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호남의 경우 내년 총선 에서 '다른 새 인물로 바뀌는 것이 좋다' 는 응답 이 68.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총선때면 단골메뉴로 등장한 현역의원 교체 요구는 과거와는 다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 다. 무조건적인 다선의원 교체보다는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초선 의원들도 과감히 교 체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되 고 있다. 초선과 다선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면서 능력있고 참신한 새로운 인물의 기용이 필요하

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22대 총선의 최 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분당설은 물론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빅텐트론 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 재 진행형인 만큼 이같은 당내 분위기가 '태풍 의 핵'으로 변화될지 아니면 '찻잔속의 미풍'에 머물지 주목된다.

올드보이들의 유턴도 이번 총선의 특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천정배 전 국민의당 대표, 장병완 전 의원, 이용섭 전 광주 시장, 강운태 전 광주시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4선인 박지원 전 원장은 지역구였던 목포 또는 고향인 진도로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다. 6선인 천정배 의원 역시 광주 서울에 도전장을 던졌 고, 이용섭 전 시장은 광주 광산갑 출마를 고민 중이다. 장병완 전 의원과 강운태 전 시장도 광 주지역 출마설이 돌고 있다.

아울러 법조계와 관료출신 중량급 신진들이 속속 도전장을 던지면 당내 경선을 통과할수 있 을지도 관심사다.

선거구제 개편과 선거구획정 역시 총선을 좌 지우지할 변수 중하나다.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총론에는 여야가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간 또는 지역별 의원들간 유불리 가 달라 입법화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최근 제기

된 중·대선거구제 역시 여야간 이견이 명확해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로 인해 현행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대폭 손 질해야 한다는 의견과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대 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선거구 획정은 최대 변수로 부상할 것으 로 보인다. 문제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전남지 역 선거구를 현행대로 10석으로 유지할수 있을 지 여부다.

여수갑·을이 통합되거나 해남·진도·완도가 분할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남에서 1석이 줄어들 경우 선거구획정 과정 에서 극심한 신경전은 물론 현역의원간 대결을 배제할수 없다. 결국 선거구 획정은 영남지역 농 존지역의 의석 변화와 연동될 가능성이 높아 보 인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군소 진보정당들의 선전 /김태규 기자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 난 대선에서 보수정당 사상 광주 · 전남에서 역대 최고득표율을 기록한 여세를 몰아 이번 총선에 서 1석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정의당과 진보당 등 군소 정당도 노동이나 농 민 문제 등을 주제로 지역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 다. 역시 의석 확보가 목표지만 중대선거구제 개 혁 등 선거구제 문제에 올인하는 모양새다.

> 지역정치권 한 관계자는 "다가오는 총선은 당 선을 좌우할만한 각종 화두가 즐비한데다 변방 으로 전락한 정치권에 대한 지역민들의 혁신과 교체요구가 높다"며 "역대 총선보다 불확실성 이 가중되는 상황에서도 공천은 곧 당선인 만큼 경선 승리를 위한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고 말 /서울=강병운 기자

광주·대구 군공항 한묶음 특별법 발의

이용빈 "지역 특수성 고려"

광주 군공항 이전과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함께 담은 특별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은 19일 "대구·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대구·광주 군 공항의 이전 사업을 국가 주도로 추진하고, 이전 주변 지역 및 종전 부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이전·지원사업, 종전 부지 개발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 조달계획 등을 수립해 필요한 재원이 반영

되도록 명시했다.

또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의 효율적 추진과 이전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 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군 공항 이전 사업은 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 을 갖춘 사업시행자가 대체 시설을 기부하고, 국방부는 용도 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 로 추진한다.

양여 재산을 초과해 비용이 발생하면 국가가 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다른 지역 군공항 이전과 달리 대 구·광주 군공항은 대상 지역이 확정됐거나 일 부기능이 다른 공항으로 이전되는 특수성을 고 려할 때, 기존 군공항 관련 법률과 별도로 특별 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당 지도부와 충분히 상의를 거쳐 마련된 법안이니만큼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과 더불어 신공항 건설 등 국가시설 재편 탄력, 지 역 경쟁력 고도화, 국민적 편의 창출에 큰 진전

/서울=강병운 기자

NSIDE NEWS

전남 공공형 계절근로제 첫 도입 설 앞둔 터미널·송정역 가보니

▶7면 설 연휴 가볼 만한 곳·극장가 ▶12·13면

▶4면



연휴 날씨

20일(금) 21일(토) 22일(일) 23일(월) 24일(화)







설 연휴로 25일자 발행합니다

정했다

조 전라남도교육청



물아면쓰기 함께대요



설거지통 사용











변기에 물병 넣기 세탁은 한꺼번에

세차는 나중에